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발의연월일 : 2007. 5. 9.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외 8인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 중에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시장의 예산확보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국민건강보험료 조사실시, 지원중단, 환수조치, 비용부담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 나. 합 의 : 복지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4. 모·부자가정세대
5. 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장세대

제3조(지원내용) ①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 내 지원한다.

제5조(예산확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①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은 대전광역시 100분의 70을 해당 자치구는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2조, 제24조

제2조 (정의)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등 관련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1조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 한 禮遇를 받는다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敎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痕(公務 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10. 4·19革命負傷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痕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12. 公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規定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規定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자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痕者(이하 "特別功勞傷痕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痕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제41조 (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5.7.29>

【장애인복지법】 第33條

第33條 (醫療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障碍人에 대하여 障碍程度,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障碍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第1條, 第4條

第1條 (目的) 이 法은 老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 治療·療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老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老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保健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 第2條에 規定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老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illegible]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5. 9 김태훈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5. 9.

다. 상 정 일 자 :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5. 17)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훈의원)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 중에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내용을 정함(안 제3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국민건강보험료 조사 실시, 지원중단, 환수조치, 비용부담 내용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3.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의료보장을 강화코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조는 목적, 제2 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 제3조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에게 월납부액을 지원하고,
-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등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 제6조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조는 조사 실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는 등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 제9조는 시가 70% 자치구가 30%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음.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현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사각 지대 중심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의 유지와 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4
----------	-----

제안연월일 : 2007. 5. 17.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2조에 제1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제4조 제1항 중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제1항에”를 “제2조에”로 수정함(안 제4조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에”를 “제2조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